

지금은 건축계 모두가 힘을 뭉쳐야 할 때다

Time for all Architects to Unite

대부분의 산업이 국제화, 세계화되어 가면서 국가의 지원 속에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유독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건축의 설계분야이다. 6.25 민족전쟁이후 무너져 버린 도심과 주거시설들을 복구하기 위한 국가정책은 건설위주로 갈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늦어도 90년대 초기정도부터는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건축문화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이 바뀌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인 지금까지도 건설위주로 시행되는 각종 제도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환경디자인 속에 건축디자인, 도시계획디자인, 실내디자인 등이 필요하며 산업디자인회사가 그 업무를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공공디자인을 비롯하여 디자인 글자만 들어가면 모두 문화관광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설계로부터 시작되는 건축문화를 간과하고 건설위주의 정책만을 추진한 건설교통부가 자승자박한 결과이다.

모든 건축 관련법을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타 부처에서 이런 주장을 듣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이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문화만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나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보호받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 관심도는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무관심의 수준이다. 심지어는 과학기술처 소속의 기술사들 주장이 우선시되기도 한다.

15,000명이나 되는 건축사들과 건축사만을 꿈꾸며 80여 대학에서 배출되는 5년제 건축학과 학생들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건축계의 핵심인 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건축계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첫 번째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발주제도 개선이다.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적격심사제도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발주하고자 하는 규모이상의 설계를 한 실적이 없으면 거의 현상설계, 턴키설계, BTL설계에 참여할 수가 없다. 건설공사에만 적용되어야 할 제도가 창작업무인 설계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독립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기본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바, 대표적 전문직 중의 하나인 건축사자격 자체를 국가에서 거절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감리도 마찬가지이다. 건설기술법 및 주택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대형 건축물들의 공사감리는 의무적으로 감리회사가 해야 하는 강제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감리회사가 최근 3년간의 감리실적이 없으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게 되어 있다. 새롭게 수많은 기술 인력과 큰 자본금을 가지고 훌륭한 회사를 차린다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기본에도 어긋나며 기존회사들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잘못된 제도이다. 최소한 설계와 공사감리 부문에서의 적격심사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건축과 관련된 각종 법규의 정비이다.

5년제 졸업생이 이미 배출되기 시작하였는데도 그에 관련된 건축사법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축사법 개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등록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므로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건축사법 개정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문화진흥법과 건축기본

수많은 과제 해결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그 논의는 건축계가 하나로 뭉쳤을 때 가능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야기 할 때 최소한 건축계의 의견은 통일되게 만들어야 함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성 건축인들의 몫이다.
 차후에 활동할 건축계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을 그대로 물려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먼 훗날 우리의 후진들에게 얼굴을 들고 따듯이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라도
 모든 건축계가 하나로 뭉쳐야 하지 않겠는가?
 건축계 모두가 지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법도 통합법안의 형태를 취하여 이번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는 치외법권 지대처럼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법령정비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건축사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건축사들의 업무영역을 늘리려면 우선 건축사들의 전문 영역을 확대하고 그에 따르는 전문가 그룹의 결성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부 건축사들만 하고 있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법원의 감정업무, 건축평론, 건축설계심사 등을 비롯하여 경관과 같이 이미 통과된 법률의 업무들에 대한 선점도 중요하고 국회에 제안된 법안과 관련된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사검사 업무의 정착화와 설계 및 감리의 중간과정까지 조사검사업무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 매매시 건축사의 의무점검이나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의무점검과 같은 업무들이 법에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건축계와 정부, 건축계와 정치와의 연결고리를 위한 장치 마련이다.

그동안 우리 건축계는 정부나 정치권을 향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부적절한 금력 로비를 제안코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를 대상으로는 건축과 관련된 법률이나 이론을 나누는 포럼형태의 지속적인 대화채널이 유익할 것이며 정치권에는 1인 1정당 가입운동을 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정당인으로서 회비 2,000원(월) 정도를 내어 당원이 되면 건축 현안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같은 당원들끼리 연명하여 정식으로 당을 통한 제도개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법과 제도개선은 바로 정치이며 이는 당원과 유권자를 중요시하는 정치권에 직접 부딪히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축계의 자정노력이다.

우선은 건축계의 양심을 세워야 한다. 무분별한 덤핑과 위법행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하며, 자질형상과 기술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교육들을 통하여 지켜지는 우리의 정당한 행위들이 우리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모두가 공감하여야 한다. 사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건축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봉사활동을 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각종 시민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후원회원이 되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과제들 중에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수많은 과제 해결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그 논의는 건축계가 하나로 뭉쳤을 때 가능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야기 할 때 최소한 건축계의 의견은 통일되게 만들어야 함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성 건축인들의 몫이다.

차후에 활동할 건축계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을 그대로 물려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먼 훗날 우리의 후진들에게 얼굴을 들고 따듯이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라도 모든 건축계가 하나로 뭉쳐야 하지 않겠는가? 건축계 모두가 지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